

다산포럼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정전협정 조인식이 열렸다. 유엔 전폭기들이 공산군 진지를 폭격하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조인식에 걸린 시간은 단 12분. 이를 취재하던 유엔군측 기자는 100명, 일본인 기자는 10명 가량이었는데, 한국측 기자는 단 두명이었다. 이 조인식을 취재했던 최병우 기자는 "한국의 운명은 또 한번 한국인의 참여없이 결정되었으며 어떤 극적인 요소도 없고 화해의 정신도 엿볼 수 없었다"고 썼다.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이곳이 우리나라인가" 의아해 하면서 그는 그레도 "우리가 살고 죽어야 할 땅은 이곳 밖에 없다고 순간적으로 자답하였다"고 한다. 유감스럽게도 최병우 기자는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1958년 9월 11일, 금문도에서 벌어진 중국과 대만의 포격전을 취재하다가 순직했다. 정전협정은 최종적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대적 행위와 무장 행위의 정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3개월 내에 당사국 정치회의를 통해 모든 외국 군대가 철수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협의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분명히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잠정적 조처였다. 그

민주주의와 평화 지수 올리려면

러나 그로부터 불과 2개월 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조인되었고, 1954년 4월부터 두달간 열린 제네바 회담에서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정전은 잠정적 조치가 아니라 계속 연장되는 체제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런 잠정적 체제에서 한국은 각국의 노력 끝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세계 20위권의 민주국가로 되었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민주주의 지수 2022'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전 세계 167개국 중에서 24위로 평가했다. 사실 이 순위는 2021년 16위에서 상당히 하락한 것으로 그 원인은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 때문이었다. 이 보고서는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썼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현상은 올해 더 심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평화는 어떤 수준인가. 호주의 민간 연구기관인 경제평화연구소(IEP)가 발표한 '2023년 세계평화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63개국 중에서 43위였다. 이 평화지수는 '현재 진행 중인 국내외의 분쟁', '사회 안전과 안보', '군사화'라는 세 영역에서 추출한 23개 지표를 바탕으로 산정되는데, 한국은 분쟁과 사회안전 영역에서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군사화 영역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만큼 한국의 군비 지출이 평화 국가로의 발전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현주소를 설명하는데 더 심각한 지수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 지표이지만 민주주의지수나 평화지수는 우리나라의 장기적 국정지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나 평화문제를 이런 계량적 수치만으로 객관화할 수 없고 이른바 동아시아 냉전 및 분단체제의 구조적 변화에 관한 심층적 분석 위에서 지표가 설정되어야 하지만 기본 방향은 대립과 보복이 반복되는 원한의 정치와 결별하고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들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며칠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지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과 그 부속합의서인 남북군사합의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우리는 지난 정부의 평화를 위한 진정성과 노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정전 이후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70년동안 미루어진 최종적 협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평화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하노이 북미회담의 실패에 대한 성찰의 시간은 주어진 것이 아니다. 평화를 위한 이어달리기를 강조하려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이 걸림돌이었던지를 언급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평화의 위기가 미중 갈등을 축으로 하는 신냉전 상황에서 현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노선, 그리고 남북 갈등에서 비롯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화와 교류를 막고 있는 남북 불신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장애물이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반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청춘 특특



조주형 광주대 문예창작과 1년

지난 1학기 한 프로젝트를 통해 1박 2일 일정으로 농촌 일손 돕기를 하러 갔다. 영암 상리마을. 그 곳에서 나는 아침엔 농민들의 농사일을 도왔고 저녁에는 그들의 말을 들었다. 이들 동안 들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농사 절대 하지 마라", "농사는 내 대에서 끝낼 것이다.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을 거다"였다. 왜 농사를 하지 말라는 걸까. 왜 자식에게 물려주기가 싫은 걸까. 내게 있어 농사는 미래의 유망한 업종이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란 이미지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이장님의 모습은 정말 절박해 보였다. 말을 하는 내내 무언가 답답해하고 있었다. 말로는 자신의 마음을 전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내게로 전해졌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농사와 농민들의 삶이 궁급해졌다. 도대체 내가 생각했던 농업인들, 그들의 삶이 어떻게 저러는 걸까.

'농사 짓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틀째 아침, 농사일을 도우며 그들에게 들었던 말이다. "곡물자급률이란 게 있어요. 국내에서만 생산된 곡물로 비율을 내는데 이게 20% 대예요." "그것도 비율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그렇지, 예전 걸로 하면 20%도 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팔 데가 없어요." "양곡관리법이니 뭐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요."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곡물자급률은 20.9%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변경된 자급률 산정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기존의 방식대로 한다면 18.5%로 20%대 아래로 떨어진다. 이장님은 또한 한해에 기름값, 인건비, 전기세 등으로 '나가는 돈'만 해도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셈이다. 양곡관리법 역시 기존에는 '미국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부가 쌀을 사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 조항이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때에 맞춰서 법의 적용을 받는 불확실한 상황을 농가는 겪어왔다. 최근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

이 작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의 의무로 매입한다는 내용의 임의 조항 부분을 의무화로 바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도, 부정적인 여론도 많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찬반 논쟁 사이에서 농민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MZ와 알파, 밀레니얼과 XY 세대, 이 모든 세대를 잇는 하나의 문제를 짊어지면 저는 농업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 타기 전에 이장님께 들었던 말이다. 그 말을 듣고서 지금 우리는 농업에 대해 더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닐까 싶었다. 양곡관리법, 곡물자급률 등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이 문제를, 나아가 농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농사 절대 하지 마라, 농사는 내 대에서 끝낼 것이다,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을 거다'라는 말이 아니라 '농사 한번 해 보라, 내 자식도 농부 시킬 거야'와 같은 말을 듣는 시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하나 모이고 모여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마음 놓고 웃음 짓는 이장님을, 어느 농민의 얼굴을 보고 싶다.

기고



신수오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 대표 도시농부

#풍경 하. 매주 일요일 광주 풍암동 호미농장에서는 토종학교가 열린다. 1년 동안 토종 씨앗을 공부하고 전통 농사법을 배우는 학교다. 3월부터 12월까지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의 초입까지 24절기 동안 토종 씨앗으로 절기에 따라 씨앗을 파종하고 기른 작물로 밥상을 차리고 밥도심을 한다. 토종 씨앗과 전통 농사법 및 절기 기치고 토종 요리를 만들면서 생태순환을 체험하고 전통 지식의 재기능화를 목표로 터득한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 토종학교에 참여한 농부들은 토종 씨앗을 심고 가꾸어 증식(씨앗을 늘리는 것)하여 보자기장과 지구농장터 등의 도시농부와 소농들이 참여하는 장을 만들고 광주에 있는 마을텃밭, 학교텃밭 등에 나눈다. 광주·전남에서 토종 씨앗을 구하는 이들을 위한 토종 채종부 역할을 하는 것이다.(아쉽게도 10년 동안 그 거점이 된 풍암동 호미농장은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중앙공원 개발로 8월 15일 사라졌다. 토종학교는 북구 장등동으로 옮겨서 가을농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농부로 사는 즐거움

#풍경 들. 한 달에 두 번 토요일 오전 유촌동에 있는 '유덕동 텃밭정원'에서는 기후농부학교가 열린다. 유덕동 텃밭정원은 개인 경작이 아닌 마을과 단체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텃밭으로 정원과 텃밭이 조화를 이루고 꽃과 작물들이 함께하는 먹거리 정원이 특징이다. 격주로 진행되는 기후농부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텃밭 경작을 위한 기술과 탄소 발상을 줄이고 밥상의 푸드마일리지 줄이는 기후 농부로 농사와 순환을 배우고 실천한다. 음식물 찌꺼기로 퇴비를 만드는 퇴비학교, 지렁이로 음식물을 분해하는 분해정원텃밭 교육 등에 참여하며 단체 회원들과 함께 탐험러 일하며 협동하는 것도 배우고 햇볕과 땅의 기운으로 마음밭도 건강하게 돌본다. #풍경 셋. 북구 장등동에 있는 정팔아재주밭농장과 동구인문학당에서는 토종 작물로 농사를 짓고 절기 따라 김치 담는 법을 배우는 '토종밥상 동아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기후 변화는 우리가 먹는 대상과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환경 파괴적이고 영양적인 측면에서 무모한 먹거리 생산과 공급 사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재기능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공동체가 더 복원력 있는 미래로 전환하려면 위대한 재기능화 과정이 필요한데 토종 씨앗을 수집·저장·농사짓는 기술, 김치를 담는 기술, 화석연료 없이 요리하는 기술, 채소절임 기술, 지역의 야생식물을 식

별하고 채집 조리하는 기술, 고기 없는 채식 밥상을 차리는 비건 실천 등이 그것이다. 스스로 먹거리를 기르고 요리하는 기술과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구성원들은 개인의 먹거리 뿐 아니라 광주 전체의 먹거리 보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레이 울드버그는 집과 일터에서 맡은 역할과 책임, 의무에서 벗어나 그냥 '나'로서 시간을 보내고 쉴 수 있는 공공장소를 '제3의 장소'라고 한다. '제3의 장소'는 집이나 직장에서 걸려갈 만큼 가까운 곳에 있고 사회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곳이다.언제 가더라도 늘 아는 사람들(친구)을 만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술이나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곳인데 마을의 카페, 책방, 호프집, 마을공동체 사랑방 같은 장소를 말한다. 도시농부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편한 '제3의 장소'는 도시 텃밭일 것이다. 위 풍경들처럼 시민들은 도시 텃밭에서 자연스럽게 농사를 짓고 어울리며 그냥 '나'로서 시간을 보내며 스트레스를 풀고 협동과 소통의 농(農)의 가치를 몸으로 배운다. 삭막한 도시에 생태순환을 체험하고 생태전환의 길을 여는 도시농업 실천 공간이 다양하게 확대되어야 할 이유다. 다른 생명을 돌보고 기르며 그 생명을 먹는 농(農)적인 경험은 다른 생명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계기가 되며, 작물을 기르면서 생태적 감수성과 생태적 지혜, 나아가서는 생태적 용기를 터득하게 된다. 우리 이제 함께 농(農)하자. 쉐어팜(Shall we farm)? 레츠팜(Lets Farm).

社說

이상기후에 과일 흉작...농가·소비자 모두 한숨

제수용품 성수기인 추석 대목을 맞았으나 전남지역 과수재배 농가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 올해 이상기후와 냉해, 긴 장마가 겹친 탓에 사실상 수확할 과일이 없기 때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냉해로 전남 지역 과수농가 7604호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면적도 4390ha에 달했다. 6월부터 7월까지 지속된 장마에 전남 과수농가 1217호, 451ha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배와 사과를 재배하는 나주와 장성 등지 농가 피해가 컸다. 농민들은 "올 봄 냉해로 시리를 맞은 배가 기형적으로 자랐고, 장마와 태풍으로 배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파리들이 떨어져 상품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농가의 과일 출하량이 격감함에 따라 추석 물가도 치솟아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대형마트 34곳에서 배 가격은 5개에 평균 1만 6283원으로

로, 작년 추석 열흘 전 시기(추석 성수기)와 비교해 32.4% 올랐다. 전통시장 16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배 5개 평균 가격은 1만 7600원으로, 작년 추석 성수기보다 14.5% 뛰었다. 결국 추석 차례상을 불태 전통시장에선 26만 원이, 대형마트에서는 34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서민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흉작에 고통받는 농민과 물가 상승으로 부담을 겪는 서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남도가 과수농가 9150호에 농약대금, 생계비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농민들이 조기에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집행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도 농수축산물 등 먹거리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서민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만큼 수급 이상이 소비자 물가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인왕봉 개방한 무등산...내친 김에 천왕봉까지

국립공원 무등산의 정상 가운데 하나인 인왕봉이 57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광주시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3일 인왕봉에서 상시 개방 개동식을 갖고 목재 울타리를 걷어내고 시민들과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 인왕봉 개방은 1966년 공군부대(방공포대) 주둔이후 57년 만이다. 상시 개방 구간은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군부대 후문 옆을 지나 인왕봉 전망대까지 왕복 390m다. 인왕봉 첫 상시 개방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등산 애호가들이 몰려들어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하루에만 무등산을 찾은 탐방객 8000여 명 가운데 1300여 명이 인왕봉에 올랐다. 탐방객들은 탁 트인 정상에서 멀리 합평 들녘까지 조망할 수 있어 탄성을 지르며 환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무등산 정상에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탐방길이

폭 1.8m로 비좁아 두 사람이 교행하는 데 불편하고 탐방로가 이어지지 않아 '유턴 하산'하는 점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인왕봉 상시 개방은 무등산 정상에 시민들 품으로 돌려줬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무등산 정상은 인왕봉 외에도 천왕봉과 지왕봉이 있는데 2011년부터 매년 적게는 두 번, 많게는 네 번 한시적으로 개방됐다. 인왕봉 상시 개방을 계기로 나머지 천왕봉과 지왕봉도 시민들이 언제든지 탐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천왕봉은 무등산의 최고봉이고 지왕봉은 일진왜란 당시 김덕령 장군이 무예를 연마한 곳으로 의미가 깊다. 천왕봉에 오르지 못한 진정환의 의미의 정상 개방이라 할 수 없다. 무등산의 온전한 정상 복원을 위해서라도 군부대 이전을 이뤄내야 한다. 광주 군공할 이전과 맞물려 소원해진 무등산 정상에 군부대 이전이라도 별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바둑은 출발점인 포석에서부터 막판 끝내기까지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치와도 닮은꼴이다. 승부가 나기 전까지 은갖 전술과 전략이 난무하고 고비마다 명암이 엇갈리며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는 것도 정치와 바둑이 갖는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세력(집)의 규모로 승패가 갈리는 바둑과 민심의 지지세에 따라 정권 창출 여부가 결정되는 정치권의 생리도 비슷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크게 출렁이고 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이 가결되고 26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된 것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여야의 명암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여권은 '야당 탄압'의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영장이 발부된다면 야권은 사법리스크의 현실화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둑의 시각으로 정치를 분석해보면 잘 보이는 경우가 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정치판은 때로는 몰라서며 타협하는 '세력 바둑'보다는 끊임없이 몰고 늘어지는

'싸움 바둑'과 닮았다. 한 집, 반 집 사이가 나는 계가(計家) 바둑이 아닌 한 쪽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불계(不計) 승부가 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정쟁의 피로감에 지친 민심의 후폭풍을 불러 내년 총선에서 여야 어느 한 편의 몰락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위기에 처한 민주당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국회 회기중에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폼수'에 맞서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번복한 부결 요청보다는 가결을 당부하는 '정수'로 대응했다면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다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가결표된 진 의원들을 끝까지 추적, 정치생명을 끊을 것"이라는 이 대표 측근의 발언과 강성당원들의 부결 인증 압박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모멸감을 불러 체포동의안 가결을 이끈 대표적 자충수(自充手)로 분석된다. 민주당 지도부의 '배신자 응징' 논리로는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과연 민주당이 추석 민심을 감동으로 이끌 통합과 결집이라는 '신의 한수'로 난국을 타개해 나갈지 주목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이사 tuim@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집부,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전담부, 문화부, 예향부, 사진부, 체육부, 경영지원국, 기획관리국, 인사부, 다자인실,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